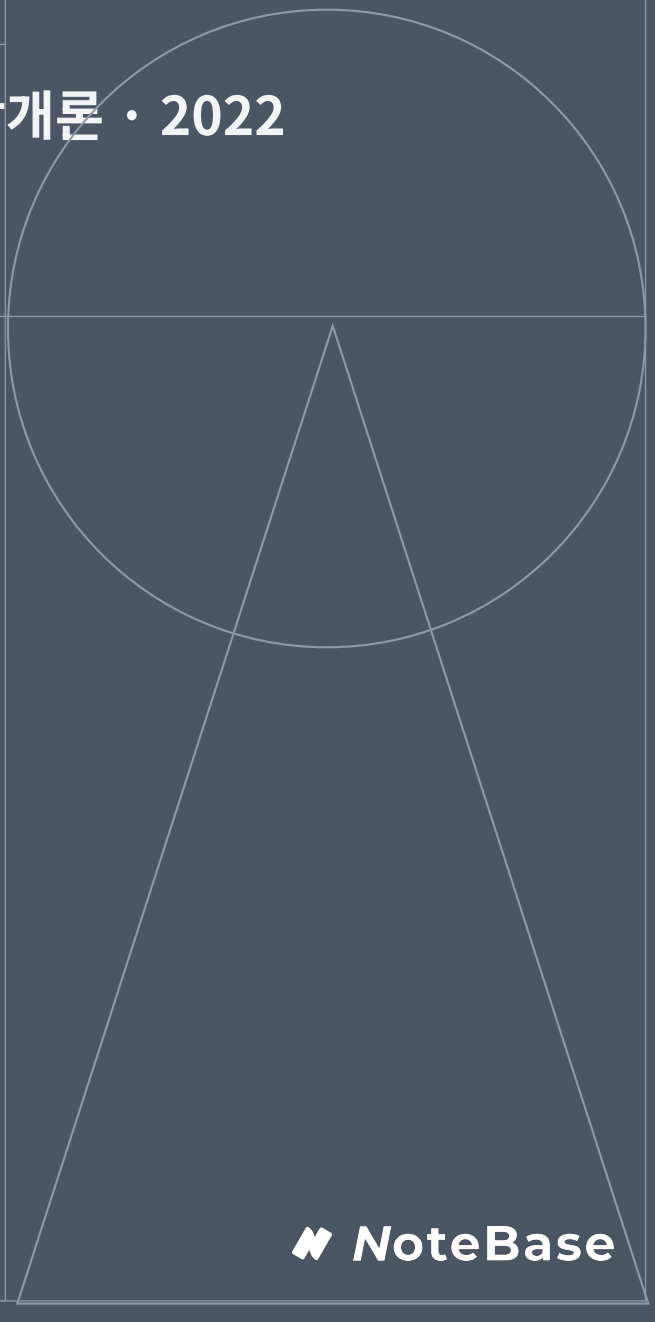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2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2

공무원/국가직/9급 · 경제학개론 · 2022

문 1. 어떤 국가의 2022년 고용상황이 다음과 같을 때, 실업률을 구하면?

◯ 취업자 수 = 153만 명
◯ 실업자 수 = 27만 명
◯ 실망실업자 수 = 20만 명
◯ 비경제활동인구 수 = 50만 명

① 10.0%
② 15.0%
③ 18.8%
④ 23.5%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180만 명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업률은 15.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경제활동인구의 범위: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의 합**이다. 실망실업자는 취업을 원하지만 구직을 포기하여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으로,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따라서 제시된 실망실업자 20만 명과 비경제활동인구 50만 명은 실업률의 분자나 분모에 더하지 않는다.

경제활동인구 계산: 취업자 153만 명에 실업자 27만 명을 더하면 153 + 27 = 180만 명이다. 이 180만 명은 현재 일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구하고 있는 사람들의 수이며, 실업률을 계산할 때의 기준 인구이다.

실업률 계산: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을 구해야 하므로,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구 수로 나누고 100을 곱한다. 두 인구의 단위가 모두 만 명이므로 같은 단위를 약분하여 $\frac{27}{180} \times 100 = 15.0\%$를 얻는다. 이는 경제활동인구 100명 중 실업자가 15명이라는 뜻이다.

계산된 실업률 15.0%는 ②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2. 인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금융자산을 가진 사람은 유리하고 실물자산을 가진 사람은 불리하다.

② 물가하락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 한다.

③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아지면 채권자는 유리해지고 채무자는 불리해진다.

④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불확실성이 제고될 수 있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앞으로의 물가와 거래의 실질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져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이는 가계의 소비·저축과 기업의 투자 계획을 어렵게 만든다.

선지별 해설

① X: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현금이나 원리금이 고정된 예금·채권을 가진 사람은 같은 명목금액으로 살 수 있는 재화가 줄어 **실질가치가 하락하는 불이익**을 받는다. 반면 부동산 등 실물자산은 가격이 물가와 함께 오를 수 있어 구매력 보전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금융자산 보유자는 유리하고 실물자산 보유자는 불리하다는 설명은 이러한 일반적 관계를 뒤바꾼 것이다.

② X: 스태그플레이션은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이다. 물가하락은 디플레이션이라고 하며, 경기침체와 동시에 나타나더라도 이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③ X: 명목이자율이 고정된 대출에서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기대인플레이션율보다 높으면, 실제 실질이자율은 예상보다 낮아진다. 채무자가 갚는 원리금의 구매력이 예상보다 작아지므로 **채무자는 유리하고 채권자는 불리하다**. 채권자는 빌려줄 때 예상했던 것보다 실질가치가 낮은 돈을 돌려받는다.

④ O: 기대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은 예상했던 물가와 실제 물가 사이에 차이를 만든다. 앞으로의 판매가격·생산비용이나 저축의 실질 수익을 예측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소비·저축·투자 결정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NoteBase

문 3. 어느 기업의 비용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Q = 10$인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Q는 기업의 생산량이다)

◯ 단기 가변비용: $TVC = 2Q^2$
◯ 단기 고정비용: $TFC = 600$
◯ 단기 한계비용: $MC = 4Q$

① 단기 평균비용은 80이다.
② 단기 한계고정비용은 0이다.
③ 단기 평균가변비용은 40이다.
④ 단기 한계비용은 40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생산량이 10일 때 가변비용은 200이므로 **평균가변비용은 20**이다. 선지의 40은 한계비용에 해당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평균비용은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생산량이 10일 때 가변비용은 $TVC = 2 \cdot 10^2 = 200$이고, 여기에 고정비용 600을 더한 총비용은 800이다. 따라서 **고정비용을 포함한 총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누면 $AC = \frac{TC}{Q} = \frac{800}{10} = 80$이다.

② O: 단기 고정비용은 **생산량과 관계없이 일정한 비용**이다. 고정비용이 600으로 일정하므로 생산량이 늘어도 추가되는 고정비용은 없다. 따라서 생산량 변화에 따른 고정비용의 변화율인 한계고정비용은 0이다.

③ X: 평균가변비용은 **가변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눈 값**이다. 생산량이 10일 때 가변비용은 200이므로 $AVC = \frac{TVC}{Q} = \frac{200}{10} = 20$이다. 따라서 평균가변비용은 40이 아니라 20이며, 40은 이 생산량에서의 한계비용이다.

④ O: 한계비용은 생산량 변화에 따른 총비용의 변화율이다. 단기에는 고정비용이 변하지 않으므로 **가변비용의 변화만 한계비용에 반영**된다. 주어진 한계비용 함수에 생산량 10을 대입하면 $MC = 4 \cdot 10 = 40$이다.

NoteBase

문 4. 갑의 일주일 소득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증가했고, 이로 인해 갑의 햄버거에 대한 지출액은 300원에서 310원으로 증가했다. 이때, 햄버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햄버거의 가격은 일정하다)

①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이다.

②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사치재이다.

③ 햄버거는 열등재이다.

④ 햄버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탄력적이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햄버거 가격이 일정하므로 지출액 증가율은 수요량 증가율과 같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frac{1}{3}$로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므로**, 햄버거는 정상재이면서 필수재이다.

계산 과정

소득을 Y, 햄버거 수요량을 Q라 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 증가율에 대한 수요량 증가율의 비율인 $\eta_Y = \frac{\Delta Q/Q}{\Delta Y/Y}$이다. 여기서는 변화 전 값을 기준으로 각 증가율을 구한다.

소득 증가율: 갑의 일주일 소득은 1,000원에서 1,100원으로 100원 증가했다. 따라서 소득 증가율은 $\frac{100}{1{,}000} = \frac{1}{10} = 10\%$이다.

수요량 증가율: 햄버거 지출액은 300원에서 310원으로 10원 증가했다. 지출액은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므로, **가격이 일정하면 지출액 증가율과 수요량 증가율이 같다**. 따라서 수요량 증가율은 $\frac{10}{300} = \frac{1}{30}$로 약 3.33%이다. 햄버거 한 개의 가격이나 실제 구입 개수를 몰라도 이 비율은 구할 수 있다.

소득 탄력성 계산: $\eta_Y = \frac{1}{30} \div \frac{1}{10} = \frac{1}{3}$이다. 탄력성에는 단위가 없으며, 이 값은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증가하되 그 증가율은 소득 증가율의 1/3이라는 뜻이다.

재화의 분류: 소득 탄력성이 양수이므로 소득 증가에 따라 수요량이 증가하는 정상재이다. 또한 **소득 탄력성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므로 필수재**이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비탄력적이다. 사치재는 소득 탄력성이 1보다 크고, 열등재는 소득 탄력성이 음수인 경우이다. 따라서 '정상재이면서 필수재'라는 ①의 설명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5. K라는 재화에 대한 수요함수가 $Q_K = 200 - 4P_K$인 경우, $P_K = 10$일 때 재화 K에 대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크기는? (단, P_K는 재화 K의 가격이고, Q_K는 재화 K의 수요량이다)

① $\frac{1}{4}$

② $\frac{1}{2}$

③ 1

④ 4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수요함수 기울기의 절댓값에 **해당 지점의 가격·수요량 비율**을 곱해 구한다. 가격이 10일 때 수요량은 160이므로 탄력성의 크기는 $4 \cdot \frac{10}{160} = \frac{1}{4}$이다.

계산 과정

가격탄력성의 계산 기준: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에 대한 수요량 변화율의 비율이다. 특정 가격에서의 탄력성을 묻고 있으므로 점탄력성 공식을 적용한다. 그 크기는 $\varepsilon = \left|\frac{dQ_K}{dP_K}\right| \cdot \frac{P_K}{Q_K}$로 구한다. 여기서 P_K는 가격, Q_K는 그 가격에서의 수요량이다.

수요량과 기울기: 수요함수 $Q_K = 200 - 4P_K$에 $P_K = 10$을 대입하면 $Q_K = 200 - 4 \cdot 10 = 160$이다. 또한 $\frac{dQ_K}{dP_K} = -4$이므로 가격이 한 단위 오르면 수요량은 네 단위 줄어든다. 이 기울기는 수량의 변화 정도를 나타내므로, **가격과 수요량의 비율을 곱해야 변화율의 비율**인 탄력성이 된다.

탄력성의 크기: $\varepsilon = 4 \cdot \frac{10}{160} = \frac{1}{4}$이다.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율을 비교하므로 탄력성에는 단위가 붙지 않는다. 구한 값은 ①의 $\frac{1}{4}$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6. 디플레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비가 지연됨에 따라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인플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부와 소득의 재분배가 초래될 수 있다.

③ 주식 및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부의 효과(wealth effect)를 통해 소비를 더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④ 전월 물가상승률이 10%에서 금월 1%로 하락하였다면 디플레이션이 발생한 것이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물가상승률이 10%에서 1%로 낮아져도 **물가 수준은 여전히 상승**한다. 이는 상승 속도만 둔화한 **디스인플레이션**이며, 디플레이션은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디플레이션으로 앞으로도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면 소비자는 같은 상품을 더 싸게 사기 위해 **소비를 뒤로 미룰 수 있다**. 현재 소비가 줄면 총수요가 감소하고 기업의 생산도 위축되어 실질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② O: 예상하지 못한 물가 하락은 **명목금액으로 정해진 채무의 실질 부담을 증가**시킨다. 같은 금액을 상환해도 그 돈의 구매력이 커지므로 채무자는 불리해지고 채권자는 유리해져 부가 재분배된다. 또한 명목소득이 고정된 사람은 구매력이 높아지는 반면, 판매가격 하락 등으로 명목소득이 줄어드는 사람도 생길 수 있어 소득의 재분배가 발생할 수 있다.

③ O: 부의 효과는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변할 때 소비도 달라지는 현상이다. 주식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보유 자산의 가치가 감소**하므로 가계는 미래에 쓸 수 있는 재원이 줄었다고 판단하여 현재 소비를 줄일 수 있다. 이 효과는 디플레이션기에 소비 위축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다.

④ X: 물가상승률이 10%에서 1%로 낮아진 것은 물가가 하락했다는 뜻이 아니라 **물가의 상승 속도가 둔화**했다는 뜻이다. 금월의 물가상승률도 1%로 양수이므로 이는 디스인플레이션에 해당한다. 디플레이션은 물가상승률이 음수가 되어 전반적인 물가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현상이다.

NoteBase

문 7. 어떤 상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가정하자.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이 이윤 극대화를 추구할 경우, 완전경쟁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와 독점시장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잉여의 차이는? (단, P는 가격, Q는 수요량이고,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이다)

◯ 수요: $P = 100 - 2Q$
◯ 총수입: $TR = 100Q - 2Q^2$
◯ 한계수입: $MR = 100 - 4Q$
◯ 한계비용: $MC = 20$

① 100
② 200
③ 300
④ 400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완전경쟁에서는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 생산량이 40이고, 독점에서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아 생산량이 20이다. 생산량 감소로 사라지는 **사회적 잉여**는 $\frac{1}{2} \cdot 20 \cdot 40 = 400$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사회적 잉여는 소비자 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합으로,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 사이에서 실제 생산량까지의 면적**이다. 수요곡선의 높이는 소비자가 추가 한 단위에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이고, 한계비용은 그 한 단위를 생산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이므로 두 값의 차이가 추가 생산의 사회적 이득이다. 이 문제에서는 가격이 P, 생산량이 Q이며, 수요곡선의 세로축 절편은 100, 한계비용은 20으로 일정하다.

완전경쟁시장: 기업은 주어진 가격과 한계비용이 같아지는 수준에서 이윤을 극대화한다. 따라서 $100 - 2Q = 20$을 풀면 생산량은 40, 가격은 20이다. 사회적 잉여는 밑변이 40, 높이가 $100 - 20 = 80$인 삼각형의 면적이므로 $\frac{1}{2} \cdot 40 \cdot 80 = 1{,}600$이다.

독점시장: 기업은 생산량을 늘릴 때 얻는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을 비교하므로 **한계수입과 한계비용이 같은 생산량**을 선택한다. $100 - 4Q = 20$을 풀면 생산량은 20이다. 이를 수요식에 대입하면 $P = 100 - 2 \cdot 20 = 60$이다. 한계수입이 아니라 수요곡선에서 이 생산량에 대응하는 판매가격을 구해야 한다.

독점시장의 사회적 잉여: 소비자 잉여는 수요곡선과 가격 60 사이의 삼각형 면적으로, $\frac{1}{2} \cdot 20 \cdot (100 - 60) = 400$이다. 생산자 잉여는 가격 60과 일정한 한계비용 20 사이의 직사각형 면적으로, $(60 - 20) \times 20 = 800$이다. 따라서 사회적 잉여는 400 + 800 = 1,200이다.

두 시장의 차이: 완전경쟁시장의 사회적 잉여에서 독점시장의 사회적 잉여를 빼면 1,600 − 1,200 = 400이다. 이는 생산량 20부터 40까지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라진 순이득으로, **독점에 따른 사중손실**이다. 이 구간의 수요가격과 한계비용 차이가 40에서 0으로 줄어들므로 삼각형 면적 $\frac{1}{2} \cdot (40 - 20) \cdot (60 - 20) = 400$으로도 구할 수 있다. 도출한 차이 400은 ④의 값과 일치한다.

NoteBase

문 8. 다음의 경제상황에서 초래될 수 있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가) 경기를 활성화시키고자 사회간접자본 분야의 정부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
(나)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생산비용이 증가하였다.
(다) 경기전망이 밝아지자 기업들은 투자를 대규모로 증가시켰다.

① (가)는 물가를 하락시킬 것이다.
② (나)는 실질GDP를 증가시킬 수 있다.
③ (다)는 물가를 상승시킬 수 있다.
④ (가)는 총공급 증가요인이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기업의 투자 증가는 **총수요를 증가**시킨다.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총수요 확대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늘려 **물가 상승 압력**을 낳을 수 있다.

선지별 해설

총수요는 경제 전체의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이며, 정부지출과 투자는 그 구성 항목이다. 각 상황의 직접적인 단기 효과를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① X: (가)의 정부지출 증가는 재화·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늘려 총수요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다른 조건이 같으면 물가를 하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 압력**을 낳는다.

② X: (나)처럼 원자재 가격이 올라 생산비용이 증가하면, 기업은 같은 물가수준에서 이전보다 적게 생산하려 한다. 따라서 **단기 총공급이 감소**하여 총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고, 다른 조건이 같으면 실질GDP는 감소하며 물가는 상승한다.

③ O: (다)의 기업 투자 증가는 기계·설비 등에 대한 지출을 늘린다. 투자는 총수요의 구성 항목이므로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단기 총공급곡선이 우상향하는 구간에서는 **실질GDP와 물가가 함께 상승**할 수 있다.

④ X: (가)에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지출을 늘린 것은 직접적으로 **총수요 증가요인**이다.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장기적으로 생산능력을 높일 수는 있지만, 제시된 정부지출 확대의 직접적인 단기 효과는 총공급 증가가 아니라 총수요 증가로 분류한다.

NoteBase

문 9. 어느 나라의 생산함수가 $Y = AK^{0.4}L^{0.6}$로 주어진 경우, 경제성장률, 노동 증가율,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이 각각 5%, 5%, 1%라고 할 때, 다음 성장회계모형을 이용하여 자본의 기여도를 구하면?

$$\frac{\triangle Y}{Y} = \frac{\triangle A}{A} + \alpha\frac{\triangle K}{K} + (1-\alpha)\frac{\triangle L}{L}$$

$$\text{경제 성장률} = \text{총요소 생산성의 기여도} + \text{자본의 기여도} + \text{노동의 기여도}$$

(단,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이고 $0 < \alpha < 1$이다)

① 0.5%

② 0.7%

③ 1.0%

④ 3.0%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노동의 기여도는 노동 증가율 5%에 0.6을 곱한 3%포인트이다. 경제성장률 5%에서 총요소생산성의 기여도 1%포인트와 노동의 기여도를 빼면, **자본의 기여도는 1%포인트**이다.

NoteBase

계산 과정

성장회계모형은 경제성장률을 총요소생산성·자본·노동의 기여도로 나눈다. 여기서 Y는 총소득, A는 총요소생산성, K는 자본, L은 노동이다. 생산함수 $Y = AK^{0.4}L^{0.6}$에서 자본과 노동의 생산탄력성은 각각 0.4와 0.6이므로, 각 요소의 증가율에 이 가중치를 곱하여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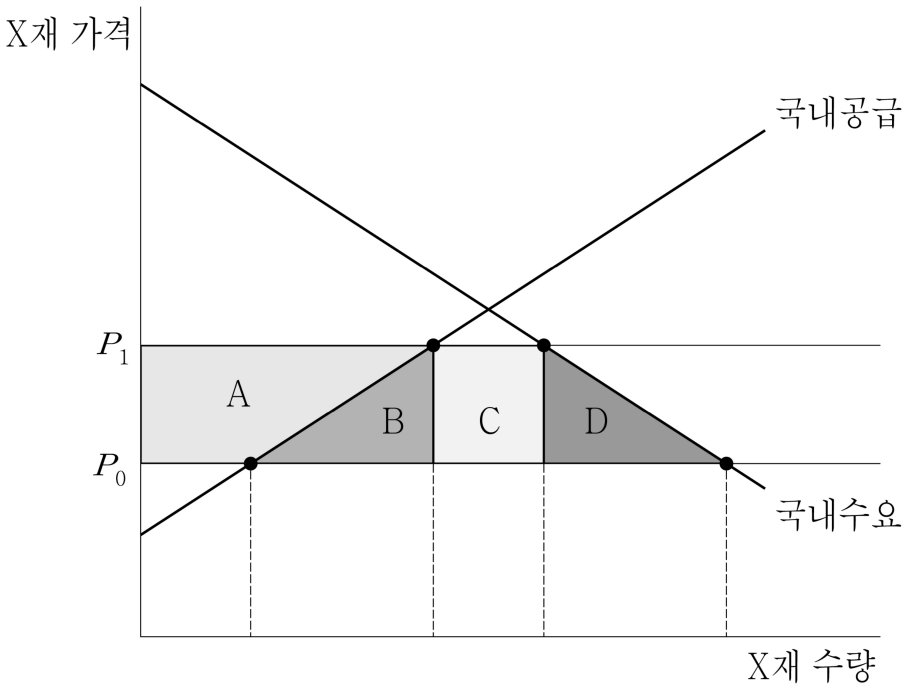
노동의 기여도: $0.6\frac{\Delta L}{L} = 0.6 \cdot 5\% = 3\%$이다. 이는 노동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3%포인트 기여했다는 뜻이다. **노동 증가율 5%를 그대로 빼는 것이 아니라** 가중치 0.6을 반영해야 한다.

자본의 기여도: 총요소생산성 변화율은 별도의 가중치 없이 성장에 기여하므로 그 기여도는 1%포인트이다. 전체 경제성장률에서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를 빼면 $5 - 1 - 3 = 1\%$포인트이다. 이 값은 **자본 증가율 자체가 아니라** 자본 증가율에 0.4를 곱한 $0.4\frac{\Delta K}{K}$이다.

따라서 자본의 기여도는 1%포인트이며, 선택지에서는 ③의 1.0%에 해당한다.

NoteBase

문 10. 다음은 시장 개방 후 어느 나라의 X재에 대한 국내 수요곡선과 국내 공급곡선을 나타낸 그림이다. 현재 X재의 국내가격이 P_0일 때, 정부가 수입 관세를 부과하여 X재의 국내가격이 P_1으로 상승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관세부과를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① 관세부과 후 생산자잉여는 A만큼 감소한다.

② 관세부과 후 경제 전체의 후생은 B + D만큼 감소한다.

③ 관세부과 후 정부는 C만큼의 관세수입을 얻는다.

④ 관세부과 후 소비자잉여는 A + B + C + D만큼 감소한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관세로 국내가격이 오르면 국내 생산자가 받는 가격과 공급량이 늘어나므로 생산자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①의 '감소한다'는 증가 방향을 반대로 설명한 것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생산자잉여는 국내 생산자가 받는 가격선 아래이면서 국내 공급곡선 위에 있는 면적이다. 가격이 P_0에서 P_1으로 오르면 국내 공급량도 증가하므로 이 면적이 커진다. 그림에서 새로 늘어난 면적이 A이므로 생산자잉여는 **A만큼 증가한다**.

② O: 경제 전체의 후생은 소비자잉여, 생산자잉여, 정부의 관세수입을 합한 것이다. 소비자잉여는 A + B + C + D만큼 감소하지만 생산자잉여는 A만큼, 정부수입은 C만큼 증가하므로 순후생은 B + D만큼 감소한다. **B는 생산 왜곡에 따른 손실, D는 소비 위축에 따른 손실**이다. B는 수입품보다 생산비가 높은 국내 생산이 늘어나 발생하고, D는 관세가 없었다면 이루어졌을 이로운 소비가 줄어들어 발생한다.

③ O: 관세수입은 단위당 관세에 관세부과 후 수입량을 곱한 금액이다. 그림에서 단위당 관세는 $P_1 - P_0$이고, 관세부과 후 수입량은 P_1에서의 국내 수요량과 국내 공급량의 차이이다. 따라서 이 가격 차이를 높이로, **관세부과 후 수입량**을 밑변으로 하는 직사각형 C가 정부의 관세수입이다.

④ O: 소비자잉여는 국내 수요곡선 아래이면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선 위에 있는 면적이다. 가격이 P_0에서 P_1으로 오르면 소비자는 구매를 줄이고, 계속 구매하는 재화에도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한다. 이 두 효과로 줄어드는 소비자잉여가 그림의 **A + B + C + D**이다.

NoteBase

문 11.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두 가지 특성으로 옳은 것은?

① 효율성, 형평성

② 비경합성, 비배제성

③ 공공성, 가치성

④ 외부성, 대중성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공공재는 한 사람이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 가능량이 줄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소비에서 배제하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갖는다.

개념 구분

비경합성: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양이나 편익을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가로등 불빛을 한 사람이 이용해도 다른 사람이 같은 불빛을 이용할 수 있다. 사과처럼 한 사람이 먹으면 다른 사람이 먹을 몫이 줄어드는 재화와 달리 **소비자 사이에 소비를 둘러싼 경쟁이 없다**.

비배제성: 재화가 일단 공급되면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가로등 불빛의 혜택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행인만 골라 제외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른 사람의 소비량에 관한 비경합성과 달리, 이용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관한 특성이다.

공공재의 구별 기준: 단순히 공익성이 크거나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는 뜻이 아니라,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함께 갖는다는 뜻이다. 효율성·형평성은 자원배분을 평가하는 기준이며, 공공성·가치성·대중성 같은 표현도 이 두 소비 특성을 대신하는 정의가 아니다. 외부성은 거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보상 없이 편익이나 비용이 미치는 현상으로, 공공재의 두 특성과 구별된다.

NoteBase

문 12. X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것은?

① X재의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② X재의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③ X재가 정상재이고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④ X재가 열등재이고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보완재는 X재와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므로,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그 재화의 소비가 늘면서 X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선지별 해설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수요의 증가는 X재의 각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하려는 양이 늘어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는 X재 자체의 가격 변화가 아니라 관련 재화의 가격이나 소득 변화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한다.

① O: 보완재는 X재와 함께 소비하는 재화이다. 보완재 가격이 하락하면 보완재의 소비가 늘고, 함께 사용하는 **X재에 대한 수요도 증가**한다.

② X: 대체재는 X재 대신 소비할 수 있는 재화이다. 대체재 가격이 하락하면 소비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대체재로 소비를 옮기므로 **X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X재의 수요를 증가시키는 변화는 대체재 가격의 상승이다.

③ X: 정상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증가**하는 재화이다. 따라서 X재가 정상재일 때 소비자의 소득이 감소하면 X재에 대한 수요도 감소한다. 수요가 증가하려면 소득이 증가해야 한다.

④ X: 열등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가 감소**하는 재화이다. 소득이 늘면 소비자가 다른 재화로 소비를 옮기므로 X재에 대한 수요는 감소한다. X재가 열등재일 때 수요를 증가시키는 변화는 소득의 감소이다.

NoteBase

문 13. 현재 국제 유가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이 폭등했다. 이때, 정부가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인하한다면, 휘발유 시장의 변화로 옳은 것은? (단, 소비자는 휘발유와 음식에만 자신의 소득을 지출하고 휘발유와 음식은 모두 정상재이며,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제외한 모든 조건은 동일하다)

① 휘발유의 소비량은 변화 없다.

② 휘발유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③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변화 없다.

④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하락한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을 낮추면 휘발유에 붙는 세금 부담이 줄어 **소비자가 지불하는 시장 가격이 하락**한다. 이는 국제 유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 세율 인하 전후를 비교한 변화이다.

선지별 해설

비교 기준은 국제 유가가 이미 오른 상태에서의 세율 인하 전후이다. 국제 유가·명목소득·음식 가격 등 다른 조건은 그대로 두고, 휘발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세율만 낮춘다.

① X: 휘발유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세율 인하로 휘발유 가격이 내려가면 같은 소득으로 살 수 있는 재화의 양이 늘어난다. 휘발유는 정상재이므로 이러한 실질구매력 증가에 따른 소득효과는 휘발유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② X: 휘발유의 소비량은 감소하지 않고 증가한다. 음식 가격이 그대로인 상태에서 휘발유 가격이 하락하면 휘발유가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해져 휘발유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가 발생한다. 정상재인 휘발유에서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가 모두 소비를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X: 휘발유의 시장 가격은 **변화 없는 것이 아니라 하락한다**. 세율이 낮아지면 소비자가 내는 가격과 공급자가 세금을 제외하고 받는 가격 사이의 격차가 줄어든다.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세금이 포함된 공급곡선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므로, 기존 수요곡선과 만나는 균형가격이 낮아진다.

④ O: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세율 인하는 휘발유의 세금 부담을 줄여 **소비자가 지불하는 균형가격을 낮춘다**. 다만 이는 세율 인하 직전보다 가격이 내려간다는 뜻이며, 국제 유가 급등 이전의 가격 수준까지 내려간다는 뜻은 아니다.

NoteBase

문 14. 완전고용 상태에 도달한 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② 마찰적 실업이 존재하지 않는다.

③ 실업자는 실망실업자로만 구성된다.

④ 모든 경제활동인구가 취업할 수 있게 되었다.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완전고용에서는 **경기적 실업이 사라지고**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남는다. 이때의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완전고용은 경기 침체에 따른 총수요 부족으로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없는 상태이다. 일자리를 탐색하는 과정의 마찰적 실업과 노동자의 능력·지역 등이 일자리의 요구와 맞지 않아 생기는 구조적 실업은 남을 수 있다. 이 두 실업에 따른 실업률이 자연실업률이므로, 완전고용 상태의 실업률은 **자연실업률과 일치**한다.

② X: 마찰적 실업은 이직이나 신규 취업 과정에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는 데 시간이 걸려 발생한다. 경기가 정상적이어도 구직과 채용이 즉시 이루어지지는 않으므로,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 실업은 존재**한다.

③ X: 실망실업자는 취업을 희망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다.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있지 않으므로 공식 고용통계에서는 실업자가 아니라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구직활동을 하는 마찰적·구조적 실업자는 존재할 수 있다.

④ X: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인구이다. 완전고용 상태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자가 남으므로, 경제활동인구 전원이 취업한 것은 아니다. 완전고용의 기준은 모든 사람이 취업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적 실업이 없는 것**이다.

NoteBase

문 15. 작년에 어느 나라의 감자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감자에 대한 소비량은 감소했다. 이때, 이 나라에서 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감자는 기펜재(Giffen goods)이다.

② 대체효과에 의해 감자의 소비량은 증가한다.

③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하면 감자의 소비량은 감소한다.

④ 감자 가격 하락에 따른 가격효과의 경우,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작다.

정답 4번

간단한 해설

감자 가격이 하락했는데도 소비량이 감소하려면, 소비를 줄이는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소비를 늘리는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커야 한다**. ④의 '작다'는 '크다'로 고쳐야 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기펜재는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가격과 수요량이 같은 방향으로 변하는 재화**이다. 문제의 감자는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소비량이 감소했으므로 기펜재에 해당한다.

② O: 대체효과는 효용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소비 구성이 달라지는 효과이다. 감자 가격이 하락하면 다른 재화에 비해 감자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지므로, **대체효과는 감자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③ O: 기펜재는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량이 감소하는 열등재**이다. 감자 가격 하락으로 구매력이 높아지면 소득효과에 따라 감자 소비량이 감소한다. 같은 성질에 따라 가격이 일정한 상태에서 소비자의 소득이 증가해도 감자 소비량은 감소한다.

④ X: 가격효과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를 합한 전체 소비량 변화이다. 이 경우 대체효과는 감자 소비량을 늘리고 소득효과는 줄이는데, 실제 소비량은 감소했다. 따라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대체효과의 절댓값보다 커야 한다**. 반대로 소득효과의 절댓값이 더 작다면 대체효과가 우세하여 감자 소비량은 증가한다.

NoteBase

문 16. 국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국채의 수익률곡선이란 국채의 만기와 만기수익률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② 만기수익률과 국채가격은 정(+)의 관계에 있다.

③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유동성위험을 감안하여 장기채권보다는 단기채권을 더 선호한다.

④ 일반적으로 정부의 국채발행은 확장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목적으로 이루어진다.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국채가 지급할 이자와 원금이 일정할 때, 만기수익률이 높아지면 이를 할인한 현재가치인 국채가격은 낮아진다. 따라서 두 변수는 정(+)이 아니라 **부(-)의 관계**에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국채의 수익률곡선은 한 시점에서 **만기별 만기수익률**을 연결한 곡선이다. 가로축에 만기, 세로축에 만기수익률을 놓아 이자율의 기간구조를 나타낸다.

② X: 만기수익률은 약정된 이자와 원금의 현재가치를 국채가격과 같게 하는 할인율이다. 지급될 이자와 원금이 일정하면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현재가치는 작아지므로 국채가격은 하락한다. 따라서 만기수익률과 국채가격은 '정(+)'이 아니라 **부(-)의 관계**이다.

③ O: 유동성 프리미엄이론은 투자자들이 자금을 오래 묶어 두는 데 따른 부담과 중도 매각 시 가격변동위험 등을 고려해 **장기채권보다 단기채권을 선호**한다고 본다. 따라서 투자자에게 장기채권을 보유하게 하려면 이러한 부담을 보상하는 추가 수익률인 유동성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④ O: 확장적 재정정책은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세금을 줄여 총수요를 확대하는 정책이다. 이때 세입만으로 지출을 충당하기 어려우면 정부는 **국채발행을 통한 차입**으로 부족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

NoteBase

문 17. 어느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 종량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조세 부담이 가장 큰 것은? (단, 종량세의 세율은 같고, 해당 물품에 대한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고 공급곡선은 우상향하는 직선이다)

①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2,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1.8

②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3,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7

③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0.7,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3

④ 수요의 가격탄력성은 1.8, 공급의 가격탄력성은 0.2

정답 1번

간단한 해설

종량세는 수요와 공급 중 **상대적으로 가격탄력성이 작은 쪽**에 더 많이 귀착된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0.2이고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1.8이면 소비자가 가격 상승에도 구매량을 줄이기 어려워, 단위당 세액의 90%를 부담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종량세는 거래되는 물품 한 단위마다 일정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소비자 부담은 세금 부과로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이 오른 부분이다.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면 소비자가 구매량을 줄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에게 더 많은 부담이 돌아간다.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절댓값을 E_d, 공급의 가격탄력성을 E_s라 하자. 주어진 직선 수요·공급곡선에서 과세 전 균형점의 탄력성을 사용하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위당 세액의 비율은 $r = \frac{E_s}{E_d + E_s}$이다. 종량세의 세율이 같으므로 **소비자 부담 비율이 클수록** 소비자가 지불하는 가격의 상승액도 크다.

① 수요 0.2, 공급 1.8: $r = \frac{1.8}{0.2 + 1.8} = 0.9$이므로 소비자가 단위당 세액의 90%를 부담한다. 수요가 공급에 비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세금의 대부분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

② 수요 0.3, 공급 0.7: $r = \frac{0.7}{0.3 + 0.7} = 0.7$이므로 소비자가 단위당 세액의 70%를 부담한다. 수요가 공급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소비자 부담이 생산자 부담보다 크지만, 소비자 부담 비율은 ①보다 낮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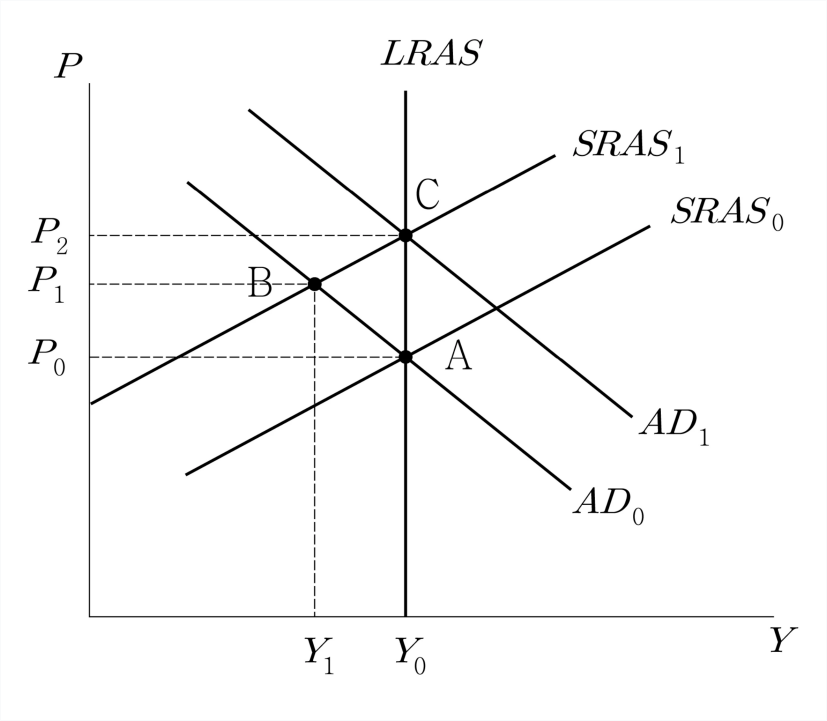
③ 수요 0.7, 공급 0.3: $r = \frac{0.3}{0.7 + 0.3} = 0.3$이므로 소비자가 단위당 세액의 30%를 부담한다. 공급이 수요보다 비탄력적이므로 **생산자가 더 많은 부담**을 진다.

④ 수요 1.8, 공급 0.2: $r = \frac{0.2}{1.8 + 0.2} = 0.1$이므로 소비자가 단위당 세액의 10%를 부담한다. 공급이 수요에 비해 매우 비탄력적이어서 세금의 대부분이 생산자에게 귀착된다.

소비자 부담 비율은 ① 90% > ② 70% > ③ 30% > ④ 10% 순이다. 따라서 같은 단위당 세액 중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담이 가장 큰 경우는 ①이다.

NoteBase

문 18. 잠재산출량 수준에서 생산하던 경제의 균형이 어떤 외생적 충격으로 인해 A에서 B로 이동하였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LRAS는 장기총공급곡선, SRAS는 단기총공급곡선, AD는 총수요곡선, P는 물가, Y는 실질 GDP이다)



① A에서 B로의 이동을 야기했던 충격에는 예상하지 못한 국제원자재 가격의 상승이 포함된다.

② A에서 B로 이동할 때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난다.

③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임금 등의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경제는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한다.

④ 정부는 이자율 인하나 정부지출 증가를 통해 경제가 C의 장기균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임금 등 요소가격의 하락은 생산비용을 낮춰 **단기총공급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킨다. 총수요가 그대로라면 장기균형은 A에서 회복되며, C에 도달하려면 **총수요가 증가**해야 한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국제원자재 가격이 예상하지 못하게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늘어 각 물가 수준에서 공급하려는 생산량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단기총공급곡선이 $SRAS_0$에서 $SRAS_1$로 **왼쪽으로 이동**한다. 총수요곡선이 AD_0에 머물러 있으면 균형은 A에서 B로 이동한다.

② O: A에서 B로 이동하면 물가는 P_0에서 P_1로 상승하고, 실질 GDP는 잠재산출량인 Y_0에서 Y_1로 감소한다. 이처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 스태그플레이션이다.

③ X: 임금 등 요소가격이 하락하면 생산비용이 줄어 단기총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여 총수요곡선이 AD_0로 유지되는 경우, 잠재산출량을 회복하는 장기균형은 AD_0와 장기총공급곡선이 만나는 **A**이다. C는 AD_1과 $SRAS_1$, 장기총공급곡선이 만나는 점이므로, 요소가격 하락만으로 C에 도달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④ O: 이자율 인하는 차입비용을 낮춰 투자 등을 늘리고, 정부지출 증가는 총수요를 직접 늘린다. 이에 따라 **총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여 AD_0에서 AD_1로 이동하면, 경제는 $SRAS_1$ 위의 B에서 C로 이동할 수 있다. C에서는 실질 GDP가 잠재산출량 Y_0로 회복되지만 물가는 P_2로 더 높아진다.

NoteBase

문 19. 갑은 작년 4월에 연 2% 금리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가입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의 변화가 다음과 같을 때, 해당 정기예금의 실질금리는? (단, 물가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로 계산한다)

◯ 현재는 2022년 4월로 간주한다.
◯ CPI(Consumer Price Index)
— 2021년 4월: 110, 2022년 4월: 111.1

① 0.5%
② 1.0%
③ 1.5%
④ 2.0%

정답 2번

간단한 해설

전년동월대비 물가상승률은 1%이다.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면 **구매력 증가율인 실질금리**는 약 1.0%이다.

계산 과정

명목금리와 기간: 예금의 연 2% 금리는 화폐 금액의 증가율인 명목금리이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4월까지 1년간의 물가상승률을 구해 같은 기간의 실질금리를 계산한다.

물가상승률: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이므로 **2021년 4월의 CPI인 110을 분모**로 삼는다.
$\pi = \frac{111.1 - 110}{110} \times 100 = 1\%$이다. CPI의 상승 폭 1.1은 지수의 차이이며, 물가상승률 자체가 1.1%라는 뜻은 아니다.

실질금리: 실질금리는 물가 변화를 반영한 구매력의 증가율이다. 금리와 물가상승률이 낮을 때는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는 근사식**을 사용하므로, 실질금리는 약 2% − 1% = 1.0%이다.

정확히 계산하면 원리금의 증가 배율을 물가의 증가 배율로 나누어 $r = \frac{1.02}{1.01} - 1 \approx 0.009901$을 얻는다. 이는 약 0.99%로, 선택지의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면 1.0%이며 ②와 일치한다.

NoteBase

문 20. A국은 오랜 기간 동안 B국에 대해 대규모의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서 B국으로부터 무역수지 흑자 축소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B국은 A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인다.

② A국은 B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춘다.

③ A국은 수입선 다변화를 통해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인다.

④ A국은 수출 다변화를 통해 B국으로의 수출을 줄인다.

정답 3번

간단한 해설

A국이 B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을 줄이면, 다른 조건이 같을 때 B국에 대한 무역수지 흑자는 **오히려 커진다**. 흑자를 줄이려면 B국 제품의 수입을 늘리거나 B국으로의 수출을 줄여야 한다.

선지별 해설

A국의 B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B국으로의 수출액에서 B국으로부터의 수입액을 뺀 값이다. 따라서 다른 조건이 같을 때 수출액이 줄거나 수입액이 늘면 흑자가 축소된다. 이 문제의 판단 기준은 A국 전체의 무역수지가 아니라 B국과의 양국 간 무역수지이다.

① O: B국이 A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높이면 B국 내에서 A국 제품의 가격이 올라 수요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A국의 대B국 수출이 줄어** A국의 흑자를 축소할 수 있다.

② O: A국이 B국 제품에 대한 수입 관세를 낮추면 A국 내에서 B국 제품의 가격이 내려 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에 따라 **A국의 대B국 수입이 늘어** A국의 흑자를 축소할 수 있다.

③ X: 수입선 다변화로 B국 제품 대신 다른 나라 제품을 수입하면 A국의 대B국 수입액이 줄어든다. 대B국 수출액이 그대로라면 수출액에서 빼는 수입액이 작아지므로 흑자는 오히려 확대된다. 흑자 축소를 위해서는 B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늘리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한다.

④ O: 수출 다변화를 통해 판매처를 B국에서 다른 나라로 옮겨 B국으로의 수출을 줄이면, 대B국 수입액이 그대로일 때 A국의 대B국 흑자는 축소된다. 다른 나라로의 수출이 늘어 A국의 전체 수출액이 유지되더라도 **B국과의 무역수지 흑자**는 줄일 수 있다.

NoteBase